

***쟁점 4

시민운동과 새로운 운동방식

발제 ●

시민사회운동과 새로운 운동방식

—탄핵무효운동을 중심으로

지금중

논평 ●

새로운 운동방식과 시민운동의 미래

정태석

시민사회운동과 새로운 운동방식

— 탄핵무효운동을 중심으로

지금중

탄핵, 촛불집회, 총선 그리고 민주주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두 달 남짓 숨 가쁜 시간이 흘렀다. 87년 민주화 투쟁 이래 최대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탄핵 가결의 비민주성, 부당성에 대해 저항했고, 그 민의는 총선에서 표심으로 반영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쟁점은 민생안정과 향후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에 관한 의제로 상당 부분 넘어간 듯하다. 따라서 각 정당과 시민단체는 개혁과제를 뽑아내고 이를 실현할 방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당장 이라크 파병문제가 급속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비정규직,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 FTA 등 시장개방 및 민생과 관련된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고, 집시법, 국가보안법, 선거법, 국민소환제, 친일청산법 등 민주주의 발전과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이에 따라 각 부문의 시민사회운동 세력은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발 빠르게 조직해 분야별 사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수구 부패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등에 업고 총선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도된 의미의 '실용주의 노선'을 운운하고 있는 등 보수적 입장으로 경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최근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행보를 맥락적으로 살펴볼 때 쉽게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민들의 정치적·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내뱉는 '실용주의'는 기존의 정의롭지 못한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을 유지·강화하는 한편, 수구정치세력과 타협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세력의 다수가 여전히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제도들—예컨대 시민적 자유, 주기적인 선거, 자유로운 정당 간의 경쟁, 자율적 이익집단의 존재 등의 '절차적 최소요건'—을 갖춘 하나의 정치체제로 보는 '최소정의'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즉, 선거를 통한 엘리트 간 경쟁의 규칙을 민주주의로 이해했던 슈페터적인 Schumpeterian 문제의식¹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수구부패 정치세력에 분연히 저항한 시민의 민주화 투쟁에 반하는 일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짓밟는 행위이다.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광범위한 투쟁이 일어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수구정치세력의 비민주성, 부당성에 대한 분노, 나아가 보다 진전된 형태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열린우리당은 깨달아야 한다. '국민소환제' 등 탄핵무효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탄핵무효운동에의 시민의 참여 및 표현방식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월드컵의 붉은 악마 현상을 기점으로 한 2002년 한국 사회의 역동성 분출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분출된 자발적 반미운동과 촛불시위, 노사모 운동과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소하기까지 한 놀랄 만한 사회적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수구정치세력에 의한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가결로

1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반성과 과제」, 『21세기 한국민주주의의 미래』(민주항쟁기념관 민주주의 사회연구소 제1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0.

인해 벌어진 일련의 탄핵무효 촛불집회는 다시 한 번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폭발적 역동성을 보여 주었다. 그것도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규모나 방식, 내용 면에서 모두 한층 업그레이드 된 방식으로 돌아왔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 토대의 변화와 삶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성장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변증법적 '양질의 전화' 과정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습폐터적인' 문제의식으로는 이미 부쩍 성장한 시민의 민주화 열망을 잠재울 수 없다. 그런 의식 상태로는 분노로 불어날 '헐크'의 몸집을 견디지 못해 터져 나가는 헐크의 옷 신세에 봉착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지구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지구방화(Glocalization : Globalization과 localization의 합성어) 시대의 흐름에서 국가의 생존력을 확보하기 어렵다.² 이제 민주주의는 보다 진전해야 할 역사적 단계에 놓여 있다. 대의민주주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제로, 정치민주주의에서 문화민주주의로, 과도한 정치·경제 중심의 국가운영에서 문화적 관점이 적용되는 균형 있는 국가운영으로, 중앙집중에서 지역분권 및 분산으로 민주

2 급격하게 진행되는 지구방화(Glocalization) 흐름에 따라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80년대 들어서면서 수평, 수직적 측면 모두에서 국가의 재구조화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평적인 재구조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상징되는 포드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와 케인즈주의적 국가 개입의 실패로 비롯된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설정의 재구조화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신사회 운동의 등장,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욕구 등으로 비롯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재구조화이다. 다시 말해 국가 주도의 성장으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발전으로의 전환인 것이다. 이같은 민주주의의 발전은 수직적인 재구조화로 이어지는데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흐름은 서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더해 정부혁신·지역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국가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수직적 재구조화가 한층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역량 및 자율성 신장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강력한 욕구는 중앙정부·지역정부의 일방적 통치행위로부터 민관협력의 협치(governance)로의 이행이라는 수평적 재구조화의 시대적 과제를 낳고 있다.

주의를 심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자유주의적 과제와 일반 민주주의의 과제를 실현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며, 근대적 국가시스템을 갖추으로써 정치 부문의 문화지체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다. 더불어 시민사회 공공영역의 근간이자 사회 구성원의 주요 사회화 기제가 되는 언론과 교육을 개혁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사회경쟁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거시적·미시적 측면 모두에서 중첩적으로 사회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공존하며, 서로 상충·대립하고 있는 사회 세력, 관행, 가치와 규범들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월드컵 열풍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운동방식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역동적 운동에너지와 주체성의 역능을 사회 발전을 위한 긍정적 흐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최근 탄핵무효운동에 참여하며 지켜본 바, 향후 상당한 속도로, 또한 전면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의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지배구조와 국가운영시스템의 변화까지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한국시민운동의 새로운 운동방식의 대두 배경과 양상 분석

이번 탄핵무효 촛불집회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의 변화 징후를 강렬하게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대표적 현상을 몇 가지 살펴보자. 첫째, 탄핵무효 촛불집회는 고도의 정치적 쟁점을 가지고, 조직되지 않은 계급과 계층, 세대와 성별을 망라하는 자발적 대중이 오프라인에서만 연인원 70여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정치개혁적 사회운동의 성격을 띤 집회였다. 이는 사회운동론에서 다뤄 왔던 운

동 주체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둘째, 집회 참여자 가운데 ‘노사모’가 섞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적으로도 다수가 아니었으며, 네티즌으로부터 ‘행사과정에서 빠져라’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요컨대 광범위한 대중참여가 조직적 동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탈단체·탈조직’의 새로운 양상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양상은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친노 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뿐 어떠한 조직으로부터도 제약받고 싶어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통한 빠르고 강력한 여론 조성과 전달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났다. 따라서 네티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론을 주도했으며 오히려 방송, 신문 등 미디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형국이 되었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로 가동되는 매체이며 그 특성상 전파의 속도가 빠르고, 의제가 사회적으로 큰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일 때는 순식간에 퍼지게 된다. 의사소통의 평등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넷째, 온라인상의 여론 확산과 의식 공유에만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으로 실천되는 경향이 더욱 커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촛불집회 현장의 자원봉사는 거의 전적으로 네티즌들이 담당했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정치담론의 형성 및 유포 등 정치활동의 일상화가 현실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사회변화가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의 주체가 현실공간의 주체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전적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사이버공동체 혹은 사이버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예고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섯째, 기존의 사회운동이 엄숙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여기 모인 대중들의 집회는 밝고 즐거운 축제와 놀이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이브 이즈 닷컴〉이라는 사이트는 ‘시사 정치 놀이터’를 표방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치 패러디가 난무한다.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여 정치를 외면함으로써 ‘탈정치화’ 되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인 권위주의에 대한 패러디와 회화화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탈정치화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생산하는 측면이 강하다. 한편 ‘개죽이’라는 스타급 캐릭터의 등장이 상징하듯 현실세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말과 문자에서 패러디 그림, 사진, 노래 등 비이성적이고 비문자적인 표현들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같은 상황을 설명한 당시의 신문기사를 살펴보자.

네티즌들의 움직임은 빨랐다. 토요일이던 13일 낮 12시 25분, ‘광화문으로 집회 장소를 변경한다’는 공지가 게시판에 떴다. 조회 수는 1만 1,052건. 같은 날,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히 뜻을 모아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을 발족했지만, 네티즌들이 이미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뒤였다. 그날 밤 광화문에는 1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밝혔다…… 2004년 3월, 〈국민을 헐박하지 말라〉는 명실공히 국민들의 ‘사랑방’이다. 인터넷 언론도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의 홈페이지도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과한 이 카페의 22일 현재 회원 수는 9만5천 명을 넘어섰다. 만들어진 지 16일밖에 안 돼 모두 15만6천여 건의 글이 올라 있다. 페이지뷰는 하루 200~300만 건을 훌쩍 넘어선다. 다음 관계자는 “카페 사상 최단·최고기록”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4.3.22)

거칠게나마 상기한 현상들을 요약하면, 한국 사회에 매우 새로운 감성과 표현력을 지닌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인 주체성³⁾이 생성,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탄핵무효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운동양상이 대단히 역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을 넘나들며 스스로 참여기제를 만들어 운동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다. 탄핵사태에 대한 의미화

방식, 행위목표의 결집화 과정과 계급과 계층, 세대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연대 과정을 볼 때 우리 사회에 새로운 주체성과 운동방식이 생성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최근 다중 Multitude⁴의 출현을 조심스레 언급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⁵ 이같은 분석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추상적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현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설득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근래의 우리 상황은 마치 권위주의와 편견, 기존의 인습에 저항했던 유럽의 68혁명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흐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조건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이는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사회의 물질 토대의 변화 및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아닌가 싶다. 요컨대 디지털 혁명을 의미하는 '비트뱅 Bit bang'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주체

3 네그리와 하트는 주체라는 개념이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주체성은 집단적인 양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주체성은 사회의 배치 속에서 사람들이 지니는 성격을 말한다. 매체와 다양한 제도(시설, 설비) 등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의 성격이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현대 자본주의는 매체와 집단적 장비들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대규모로 생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주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윤수중 역, 『제국』, 2001, 이학사, p539 참조.

4 네그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 개별자들이 특이성을 지닌 채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집단적인 형상을 말한다. 특정한 지배 장치에 의해 구조화되기보다는, 자신들의 개별 고유성을 소통하면서 공통성을 키워 나가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획일화되고 매체에 의해 구조되며 수동적인 '대중(mass)'과는 달리, 자신들의 주체적인 욕망과 주장들을 결집해 나가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같은 책, p530 참조.

5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성일, 「제국에 대항하는 다중의 정치」; 이동연, 「세대정치와 문화의 힘」, 『제국·미국·제국주의』, 문화과학 제33호; 고길섭, 「문화사회론: 좌파의 사회운동 혁신과 그 쟁점들」, 문화과학 제34호, 2003, 문화과학사 참조.

성의 등장이다. 그런 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조종동’은 7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터넷상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25억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황인태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총장이 11일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치 실천방향’ 강의에서 한 말이다. ‘조종동’ 구독자는 700만 명인데 반해 노사모 회원 가입자는 5만 명에 불과하지만, 노사모 회원들은 인터넷상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5만 명의 제공수인 25억 명분의 활동을 한다는 주장이다. 황 부총장은 이어 “왜 한 줌도 안 되는 노사모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뒤 “그것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침묵하는 다수는 이제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돌발적인 분석도 내놴다…… (《오마이뉴스》, 2004.5.11)

이는 인터넷의 네트워크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가치는 구성원 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크기는 구성원의 효용의 총합과 같다”는 명제를 제시한 ‘멧칼프의 법칙’을 인용한 주장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새삼 사이버공간에 주목하는 이유가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에 있다기보다 선거 승리라는 목표 때문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겠지만 이 또한 변화의 몸부림으로 볼 만하다. 네티즌을 움직이는 기본적 힘인 자발성과 자율성, 감수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같은 흐름은 정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개인과 사회,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근대적 설정으로부터 탈근대적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으며,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근대가 개인의 발견을 토대로 하고, 그 개인의 자유를 이념으로 표방하면서 발전해 온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개인의 권리와 가치는 집단의 권리와 목표에 종속되어 왔던 근대적 모순에 균열을 가져왔다. 탈근대적 패러다임에서 부분은 그 자체로 전체를 대변한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 전체가 부분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디지털 혁명을 의미하는 '비트뱅'이라는 용어는 부분과 전체의 새로운 연관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와 자아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면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힘든 개인 중심의 새로운 사회규범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절대 다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만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대적 소통관계와 달리, 탈근대적 소통관계는 개인 미디어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작고 다양한 메시지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빠른 속도로 확장되면서 커다란 파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⁶ 이를 잘 보여 준 극명한 사례가 이번 촛불집회이다. 1인 미디어인 '블로그'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새로운 총아로 떠오른 이유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러디 그림, 사진, 노래, 플래시몹 등이 활발하게 나타난 데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의 표현물이 문자에서 이미지로 상당 부분 이동하는 것이 보인다. 이는 일반 시민이 문화생비자Prosumer로 등장했으며, 그만큼 문화적 욕구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네티즌이 사이버공간에서 광장으로 모니터에서 뛰쳐나왔는데, 이같은 공간의 이동은 탈육화되어 있는 사이버공간만으로는 신체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감성적 욕구 충족을 통한 정체성 확립과 삶의 질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 양쪽 모두에서 공간의 형성과 배치, 소통의 작용들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가는 것이 사회적 실천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세종로를 문화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또

6 민경배, 「비트뱅, 나를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혁명」, 〈함께하는 시민행동〉 계시판, 2003.

함해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새로운 운동방식의 성과와 한계

이번 탄핵무효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시민참여⁷는 수구보수 정치세력의 쿠데타 기도를 좌절시켰으며, 진보정치 실현이 가능한 정치지형을 만들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되고 있으며 운동방식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역동성은 미래에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아직은 가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운동의 내용에서 볼 때 제도정치가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 즉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민주화가 여전히 급박한 사회의제라는 이유에서 기인한 바 크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의제에 대한 인식과 의제설정 능력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의 부도덕한 활동에 대한 감시 및 불매운동을 통한 개혁 활동, 친일인명사전 제작을 위한 온라인 모금활동 등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 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 또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은 다원적 민주사회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회의 이러한 잠재성은 네티즌의 성숙도에 따라 사이버공간은 물론 현실세계를 유평피아와 디스토피아로 카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네티즌의 자각과 민주주의적 실천만이 국가와 자본의 이중 공세로부터 사이버공간, 나아가 현실세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려는 네

7 현재 한국사회에서 인터넷 보급률과 사용률을 감안할 때 국민의 70% 정도를 네티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네티즌과 시민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티즌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사이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대략 살펴보면, 첫째,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집중적으로 얻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편협성이다. 이 때문에 네티즌의 정치적인 격차(political divide)가 발생하는데, 예컨대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의견에 동의하고 참여했지만 다른 공공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연예인의 신변잡기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등 연예, 오락에 몰입함으로써 균형 있는 삶의 방식에서 멀어지고 탈정치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터넷은 이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네티즌의 배타성이다. 인터넷에서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동조자를 찾는 과정을 통해 집합적인 의견의 상승효과를 만드는데 자신의 의견과 다를 경우 쉽게 극단화된다. 이는 바람직한 공론문화 형성을 방해하고 극단적 사회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인터넷에서조차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연, 지연 등 연줄 의식과 패거리 의식이 만연하다. 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민주적 수평관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버공간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으로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운동방식의 전망과 과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등으로 나타난 17대 총선 결과는 기존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당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치개혁을 비롯해 전반적인 사회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그동안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는 국가에 대한 감시, 감독, 입법활동 등 정책개입을 해 오던 시민사회운동의 역할이 조정됨으로써 국가, 시민사회, 시장 상호 간의 구조적 관계 재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는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선택적 포섭' 과 새로 등장한 주체성의 새로운 운동방식이라는 두 가지 환경변화로 인해 운동방향과 내용, 방식 등을 스스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다양한 개혁과제의 실현 때문에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시민사회가 담당하던 역할을 정치사회가 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은 역할조정을 통해 새로운 시민사회운동 영역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⁸

한편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이에 따른 새로운 주체성의 등장, 자발적 사회운동 방식의 활성화는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에 커다란 자극을 주며, 자기 혁신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우리 사회의 역동적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전략, 전술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갖춰 나가야 한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인터넷 실명제를 비롯한 정보화 관련 악법을 철폐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각종 검열과 통제로 인해 침해당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신장해야 한다. 정보화 관련 악법은 네티즌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의 동력 자체를 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쌍방향 조직화가 절대적 과제이다. 즉, 온·오프라인 운동을 접합함으로써

8 지난 5월 4일 열렸던 '17대 총선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토론회에서 박원순은 발제를 통해 '에드보커시(Advocacy)' 운동은 첫째, 운동의 틀이 보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진전해야 한다. 둘째, 정치사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황무지'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 셋째, 백화점식 종합적 시민운동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운동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현재의 정당과 정치세력의 한계를 극복할 시민적 대안정치세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에드보커시' 운동의 약화에 따라 시민운동이 의식개혁, 사회복지서비스, 생활환경변화 등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자리이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의 혁신과 대중성·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영역이 갖는 장점은 최대한 확장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정보화 기반 강화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움직임에 파악하고 교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미디어교육을 활성화시켜 미디어를 독해, 창조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자율적인 정보윤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오프라인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공공 부문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더욱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체제내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주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의 구성과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차이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견과 느낌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표출하는 직접민주주의 공간이다. 여기서의 공간이란 사이버공간과 현실공간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 양자 사이의 소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적 도시공간의 재편, 특히 자유로운 의사표출이 가능한 민주적인 광장 조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여섯째, 지구방화Glocalization 시대의 특징은 분권과 분산을 통한 지역화와 지역과 지역, 지역과 세계의 소통과 교류이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바로 인터넷이며, 분산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기체이다. 따라서 새로운 주체성은 사이버공간이라는 '지역local' 과 지방자치단체라는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local' 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게 된다. 다중심 속의 중심, 다양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회생태계 확보는 이러한 풀뿌리 조직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분권과 분산, 분업을 통한 국가 재구조화는 시대적 과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의 미래와 네티즌의 주체 형성에 긴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윤리에 관해 조금 더 부연해 보자. 디지털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윤리문제가 등장하였다. 소위 정보 불평등문제,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의거한 과도한 감시통제 사회 구축문제, 정보공간 오염문제, 정보공간에 따른 인간소의 및 인간성 파괴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윤리문제 가운데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며 동시에 학교교육이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있고,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보화 관련 윤리문제는 정보공간 오염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가상공간에서 자행되는 비방, 욕설, 저주, 인신공격, 근거 없는 폭로 등의 문제이다. 디지털 정보 매체 사용자인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같은 행위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⁹

사이버공간의 윤리문제 발생은 디지털 매체의 사용자가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따라서 디지털 공간의 윤리문제는 사이버공간 사용자로 하여금 사이버공간과 그 속의 또 하나의 '나'인 가상자아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 윤리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현실세계에서 예절교육이 도덕교육의 전부가 아니듯 가상공간에서의 예절교육 또한 정보윤리교육의 전부가 아니며,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다. 가상자아는 이른바 자아구성의 세 요소라고 하는 신체적 자아, 정신적 자아, 사회적 자아 가운데 신체적 자아만 결여된 자아이다. 다시 말해 탈육화된 자아일 뿐이며, 자아간의 네트워크적 관계성만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신체적 제약에서 자유로움으로써 발생하는 가변성으로 인해 바람직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가상자아는 실재자아의 존재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 이는 가상자아

9 「디지털 정보화 시대 도덕교육에 관한 연구」, 『도덕교육연구』 제12권 2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000.

가 스스로 에너지를 충족할 수 없는 '비자족성'에서 기인한다. 가상자아와 실재자아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인 관계이다. 이처럼 가상자아가 실재자아에 기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사이버공간에서 윤리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부연컨대, 가상자아와 가상공간, 실재자아와 실재공간이 다르다는 데만 집착할 경우 그리고 가상공간과 가상자아가 실재공간과 실재자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가상공간과 가상자아가 실재공간과 실재자아와 다르다는 점을 외면하는 데서 인터넷중독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재공간과 실재자아가 가상공간과 가상자아에 흡수, 매몰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윤리교육은 사용자의 가상공간과 가상자아와 실재공간과 실재자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이 2차원 텍스트식인 HTML 중심이 아닌 3차원의 가상현실인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중심으로 전개되면 둘의 관계에 대한 더욱 명료한 자각이 요구된다. 가상현실은 사용자의 지각능력을 집중시키는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에 매몰될 개연성이 더욱 커진다. 결론적으로, 실재자아가 가상자아와 가상세계에 가져야 할 태도는 가상자아를 무시하는 것도 그것에 동화하는 것도 아닌 화합의 네트워크 관계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말로 빠르고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가 디스토피아로 가는 역기능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예방책일 것이다. 따라서 정보윤리체계의 정립과 그에 따른 윤리교육체계의 정립 및 실시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탄핵정국의 유일한 승리자는 시민(인민)이다. 의회권력보다는 시민권력이, 대의제보다는 직접민주주의가 우선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각인시킨 계기였고 시민의 내재된 역동적 힘을 과시한 기회였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토대의 변화, 소통방식의 변화, 민주주의의 발전 등은 새로운 감수성을 지닌 주체성을 등장시켰다. 향후 우리 사회는 이들의 성장과정과

경로에 따라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역관계가 재구조화될 것이며 우리 미래의 모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

지금총 c-man21@hanmail.net | 문화연대 사무처장,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2004총선시민연대공동집행위원장 역임.

새로운 운동방식과 시민운동의 미래

정태석

최근의 탄핵 국면에서 발생한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역동성을 보여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런 점에서 지금종의 「시민사회운동과 새로운 운동방식」은 대규모 촛불시위라는 시민적 역동성을 분출시킨 사회·역사적 조건들과 그 의미를 ‘새로운 운동방식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한 시의적절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이 시민운동의 새로운 운동방식으로서 주목하고 있는 점들은 대체로 참여자들의 특성, 참여 형태, 내부적 의사소통의 양상, 집회의 형식 등이다. 첫째, 참여자들의 특성에서 다양한 계급, 계층, 세대, 성별 등이 망라된 ‘다중’의 사회운동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특정 조직이 주도하기보다는 많은 시민단체들의 연대와 조직되지 않은 다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일어난 사회운동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네티즌들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여론을 주도해 나감으로써 전통적 매체인 신문이나 방송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사이버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또 온라인 운동이 오프라인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시위와 집회의 형식에서 엄숙하고 비장함보다는 밝고 즐거운 축제와 놀이의 형식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지금종은 여기에서 “새로운 감성과 표현력을 지닌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인 주체성”의 생성 및 확대를 통한 새로운 주체성과 운동방식의 표출을 읽

어 내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양상은 시민운동의 밝은 미래를 얼마나 보증해 주는 것일까? 우리의 고민이 심화되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탄핵반대 촛불시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2002년 월드컵 응원 과정에서의 광장 문화의 경험은 대중들이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켰으며, 이것이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축제적 시위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최근의 시민운동은 확실히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촛불시위가 어떤 조건 속에서 발생했고 또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들이 있다.

첫째는 시민운동의 목표 및 쟁점과 관련된 동원 가능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시위가 다수의 대중을 동원할 수 있으려면 그 목표나 쟁점이 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탄핵반대라는 쟁점은 부패하고 대표성을 상실한 국회의 반민주적 결정에 대해 다수 시민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띠고 있었으며, 그런 만큼 다수 시민들의 공감과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졌다. 이 점은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미촛불시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이 사건은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쟁점과 연관되어 있었기에 다수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근 시민운동에 가해지고 있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은 그리 적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민들은 원래 조직적으로 동원되기 힘든 일상적 생활인들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또한 중요한 국면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촛불시위는 시민운동이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었다.

다만 쟁점들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다수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쟁점들이 제기될 경우, 다중이 참여하는 촛불시위와 같은 시민운동의 방식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적대의 성격에 따른 운동방식의 다양성 문제이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논의들이 제도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면, 시위의 양상도 보다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양상을 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논의에서 배제된 쟁점들이나 적대들의 경우 시위의 양상은 보다 급진화될 수 있다. 이 점은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반대 한 부안 주민들의 시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해고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촛불시위가 분명히 새로운 운동방식을 보여 주기는 했지만, 이러한 운동방식이 모든 영역에서 일반화되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민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과 쟁점의 침예함 등에 따라 운동방식이 다양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촛불시위의 일시성과 시민운동의 일상성 간의 간극이라는 문제이다. 대규모 촛불집회는 특정한 사건의 촉발로 인해 일시적 동원이 이루어지는 국면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시적인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시위는 사라지고 시민운동의 일상적 활동이 이어지게 된다. 이때 폭발적인 시위의 목표나 지향이 제도 속에서 얼마나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못지않게 조직된 시민운동의 일상적 활동이 얼마나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탄핵무효 촛불시위가 지향했던 민주주의 정신을 법과 정책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촛불시위에서 동원된 상징들

을 일상적 과정 속에서 제도적으로 성취하는 전통적인 임무를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중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시민운동의 다양한 의제설정능력의 향상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넷째는 탄핵반대 촛불시위에 참여한 대중들의 특성이 어떠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다수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세대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미래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중의 주장처럼 권위주의적인 제도정치에 저항하며 탈권위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자유해방주의를 지향했던 유럽의 68 혁명과 닮아 갈 수 있을 것이다. 촛불시위의 민주주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면 보다 많은 젊은 세대를 정치적 참여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바로 젊은 세대의 능동적 참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탄핵 사태에서 드러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한편으로는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논쟁, 토론, 정보의 유통 등을 통해 민주적 토론문화와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연대 의식을 더욱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탈근대(탈현대)적 패러다임과 개인화의 역설

한편 지금중은 디지털 혁명에 따른 '탈근대(탈현대)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주목하면서도 이것이 '개인화의 역설'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근대(현대)의 모순은 개인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개인의 권리 및 가치가 집단의 권리 및 가치에 종속되어 있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탈근대는 집단에 매몰되어 있던 개인의 가치와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의 양식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개인화는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개인을 낳을 수도 있지만 파편화되고 소외된 개인을 낳을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소통과 연대'는 개인화의 역설을 극복하는 중요한 에너지가 된다.

이 대목에서 지금중은 새로운 운동방식의 거점인 사이버 공간의 양면성과 새로운 에너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글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보의 편협성과 탈정치화, 네티즌의 배타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패거리 의식 등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 온-오프라인 쌍방향 조직화,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공공성 강화, 생태적 도시공간과 민주적 광장을 통한 새로운 주체성 형성, 지역분권과 지역 간 소통, 윤리교육을 통한 정보윤리의 확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확실히 이런 대안적 노력들은 그의 주장처럼 새로운 운동방식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가 서두에서 언급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친일청산법, 선거법 개정, 국민소환제 등 각종 개혁입법과 더불어 비정규직, 청년실업, 시장개방에 따른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 불안정, 소수자들의 억압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운동방식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운동방식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화의 역설은 새로운 형식의 연대를 형성하는 조건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개인화가 진전되고 있는 사회에서 계급, 가족 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개인의 배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실업자 등 다양하고 분산된 개인들을 포괄하는 연

대의 형식과 제도화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촛불시위의 정신과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

시민운동의 역동성은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들의 상징적 동원과 자발적 참여에서 나온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들의 참여는 분명히 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점차 합리화되고 안정화되어 가면 갈수록 시민들의 상징적 동원보다는 조직된 시민운동의 일상적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 부분에서 지금중은 “서로 상충하고 대립하는 사회세력, 관행, 가치와 규범들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전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의 형성을 추구한다면 이런 점들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기존 시민운동의 역할을 제도정치가 대신하게 될 것이기에, 시민운동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점 역시 중요하다. 그렇다면 역할 조정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앞서서 언급했던 사이버 공간에 기반한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은 사실 지금중이 결론에서 시민운동의 역할 조정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 제시로 시민운동의 미래를 가늠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민운동의 미래를 위해 현 상황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점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민 대표성’에 대한 신화를 깨뜨리는 것이다. 과거 시민운동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으며, 이런 점에서 부패청산, 선거제도의 개혁,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등 일반적인 쟁점들을 통해 ‘중립성’을 내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신화는 서서히 해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경험 속에서 점차 드러났듯이, 이제 낙선의 보편적 기준을 넘어서는 특정 이념의 선택이 시민운동단체들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 이제 중립성의 틀 속에서 시민운동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운동도 다양한 쟁점들—계급, 환경, 성, 소수자, 인권, 교육, 성장, 분배, 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회의 이념적 분화 속에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촛불시위 이후 민주주의의 성숙은 시민운동 방향의 재정립을 필연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그것은 곧 다양한 쟁점들, 다양한 입장들을 취하는 전문적인 시민운동으로의 분화가 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의 신화’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면, 이제 기존의 시민운동이 암묵적으로 부여받았던 ‘시민 대표성의 신화’도 깨질 수밖에 없다. 사실 시민운동단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변’하는 데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시민단체의 ‘대표성’은 그 회원들의 경계 내에서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단체들이 시민적 대표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그들이 대변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다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시민들의 의사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의 역할이지 시민단체의 역할이 아니다. 결국 시민운동의 대표성은 의회의 취약한 대표성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의회의 대표성이 확보되고 또 시민운동이 다양한 쟁점들과 입장들로 분화되면 더 이상 대표성을 내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시민운동단체가 대변하려는 의사나 이익이 시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면, 여전히 대표성을 떨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표성은 대변성의 결과여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은 이제 각각의 성격과 입장에 맞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통한 공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단체들은 국가의 정책이나

활동들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비판적, 대안적 의견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양한 의견들 간의 경쟁, 토론, 타협 등에 참여하여 합리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촛불시위는 분명히 참여민주주의의 정신과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과 상징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촛불시위는 단순히 새로운 운동방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의 상징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시민운동은 이제 다양한 작은 촛불들로 나타날 것이며, 그 촛불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차별, 억압을 해체하는 심화된 민주주의의 상징이 될 것이다. ■

정태석 jeongts@chollian.net | 전북대 사회교육학부 교수. 저서로는 『사회이론의 구성』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6월항쟁 이후 한국시민사회의 변화와 사회운동론의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